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98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2월 18일 (음력 1월 12일) 월요일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 이명박 정부엔 광주·전남 없나 ① 인적 네트워크 붕괴

채널 단절…'정치·경제적 고립' 우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호남 소외'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청와대 수석 비서관 기용, 각료 내정 등이 지극히 영남 편향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안·미래 비전 사업 추진 불투명

실용을 기반으로 한 이명박 정부가 특정 지역의 틀을 뛰어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던 호남 민심은 영남 편향의 인적 구성에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는 냉소적인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호남 민심이 '호남인사 배제'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정권을 시작으로 영남을 기반으로 한 군부정권 및 문민정권에서의 철저한 호남 인맥 배제는 지역 개발 소외로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경제의 낙후를 실감해야 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청와대 수석 비서실과 각료 진영이 영남 인맥으로 채워지면서 이명박 정부도 과거 영남 정권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의 호남 인맥 붕괴는 호남과 정부 간의 소통 채널 단절로 이어져 겨우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광주·전남지역 현안 및 미래 비전 등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폐지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주축으로 한 '5+2 광역경제권 계획'도 서남해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전남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및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선 이후 제기된 영남 편중 인사 지적에도 불구, 각료 인선에서도 별다른 지역 배려가 없었다는 점은 이명박 정부에서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조만간 이뤄질 청와대 비서관 인사 및 정부 부처 차관 등 고위직 인사에서도 영남 인맥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인들은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추후 이뤄질 인사와 정책에서 특정 지역을 뛰어넘는 탕평책을 제시, 사회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지역 정관계 인사들은 "광주·전남 민심의 요구는 호남 인맥에 대한 특별한 대우보다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진정한 사회통합과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지역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월 대보름(21일)을 앞두고 17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08 정월 대보름 한마당 축제에 놀러오세요'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달집 태우기'를 지켜보며 가족들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부 조직개편 교착…물밑 협상 계속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오후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섰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이날도 특임장관 2자리를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2개 부처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원안을 고수했다.

하지만, 양측이 물밑 협상을 모색하고 있어 18일까지 극적 타결을 이뤄낸다면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협상이 무산되면,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국 경색을 초래, 오는 4·9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마지막으로 정든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사랑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학력 및 경력
· 광주동신고(19회)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88학번) 졸업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연수원 27기)
· 군법무관(제12사단, 국방부검찰관)
· 광주지방법원 판사(민사, 형사, 합의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민사단독, 신청, 경매)
· 광주지방법원(형사단독)
· 광주고등법원(민사, 형사, 가사)

변호사 이 관 진 올림

■ 개업장소 : 광주시 동구 지산동 342-13 심산빌딩 203호 (법원정문앞)
■ 대표전화 : (062)228-2800 팩스 : (062)228-2802

서남권특별법 국회 통과 총력

전남도 지자체 간담회 … 시민사회단체도 촉구

목포·무안·신안 등 전남 서남권 발전을 이끌 '낙후지역발전 및 지원특별법'(서남권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남해안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광주·전남시도민회의, 서남해안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동안 몇 차례 이 법의 통과를 미뤄오다가 명칭만 유사할 뿐 내용과 성격이 다른 '낙후지역 개발 촉진법'과 동시 심리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서남권특별법 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대로 서남권특별법 제정과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만약 서남권특별법 제정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불이행과 한나라당의 발목 잡기로 좌절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전남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서삼석 무안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등도 앞서 지난 15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단체장들이 함께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이번 임시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이날 "지난 1월 10일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서남권 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서남권특별법은 한나라당이 병합심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낙후지역촉진법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라고 말했다.

서남권발전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 당의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낙후지역 개발촉진특별법'과의 병합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전남 시민단체 총선 침묵 왜?

진보 위축·분열 목소리 힘 빠져

유권자들 의식 성장도 큰 원인

18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광주·전남 시민 사회단체들이 잠잠하다. 지난 16대와 17대 총선에서 후보자 낙천·낙선운동 등 적극적 정치참여운동을 벌였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광주 YMCA는 요즘 총선 등 외부 문제보다는 내부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이사·감사 선거에서 윤장현 전 이사장 등 5명의 이사가 무더기 탈락하면서 조직 결속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해보겠다는 광주 YWCA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정치 개입으로 비치지 않게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 21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일단 정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실련만이 출마 예정자들에게 '의정 활동 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는 정도다.

이런 '침묵 모드'의 이유에 대해 시민단체 안팎에서는 몇가지 분석이 나온다.

첫째는 지난 대선 이후 진보진영의 전반적 위축이다. 국민들의 지지가 크게 퇴조한 상태에서 종전같은 동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시민사회단체들간의 분열이다.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 권영길 후보진영으로 나뉜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다. 시민운동 출신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해서 시민운동의 건전성을 해쳤다는 반성도 있다.

셋째는 유권자의 의식성장이다. 낙천·낙선운동을 벌이지 않더라도 과거에 비해 불공정 심사나 밀실 공천이 크게 줄었고, 부정·부패 전력자가 출마하더라도 유권자들이 걸러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김상집 참여자치 21 대표는 "대선에서 보수진영의 압도적 승리는 진보·개혁세력을 자처하는 시민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일각에서는 겸허히 반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